

## 인쇄업, 8월 평균가동률 63.6%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개월 연속 60%대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가 중소기업 조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조사' 결과 2006년8월 중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69.8%로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1.0%p, 0.1%p 상승했으나, 2개월 연속 60% 후반에서 답보상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유형·규모별로는 '일반 제조업(69.1%)' 보다는 '이노·벤처 제조업(75.5%)' 이, '소기업(67.6%)' 보다는 '중기업(74.6%)'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개 업종 가운데 '기타 운송장비(76.5%)', '합합물·화학제품(72.8%)' 등 10개 업종에서 70%대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63.6%)',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66.1%)' 등의 업종은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생산 활동이 다소 저조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혁신기술 박람회와 우수업체·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등으로 꾸며지며, 정보통신 분야 우수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이전설명회, 이노비즈 금융포럼, 기술혁신세미나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됐다.

우수혁신기술박람회에는 정보통신·전기전자업체 등이 참가, 기술혁신관, 산학연관 등에 400개 부스를 개설하고 자사에서 개발한 신제품과 신기술을 전시·홍보했다.

또 행사장에서는 잘만테크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을 개발한 28개 업체가 기술혁신상을,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탁대식 동남정공 대표 등 99명의 중소기업인이 훈·포장을 각각 받았다.

## 한미FTA로 문화산업 고사된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미FTA의 체결' 이 한국의 문화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게임·영화·방송·음반·출판·인쇄 산업 중 인쇄를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적자의 폭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 관세 장벽에 있어 한국은 0~8%대의 관세가 있으나, 미

국은 대부분(영화, 음반 일부제외) 무관세이며 또한 문화산업의 개방도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의 개방도는 시장접근, 내국인대우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의 대미경쟁력 분석에서도, '인쇄'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개방의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력 분석에서는 완전개방에 가까울수록 국내 생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한미FTA에 따른 문화산업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화관광부가 FTA협상과정에 국내 문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물론 체결이 될 경우를 대비, 손실의 보전방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중국진출 중기, 비용절감 매력 감소·이직률도 높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진출을 하고 있지만 높은 이직률과 중간관리자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및 애로조사'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주요 목적은 '중국 시장 개척' (49.5%)과 '인건비 등 비용절감' (28.0%)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도 조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다' (51.9%)는 응답이 크게 줄어들어 2년간 국내 내수시장이 크게 침체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진출 기업의 생산구조변화로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주로 한국에서 원자재를 조달(52.9%)해 중국에서 조립 후 제3국으로 판매(36.9%)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업체의 51.9%가 원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구매, 생산품을 중국에서 판매(60.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 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에 진출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중국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투자목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진출한 기업의 경영상 최대 애로사항은 노무관리(45.0%)와 인건비 및 기업부담금 상승(22.0%)으로 나타났고 최근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가 우리 업체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제조업 자금난 완화 ... 인쇄는 악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이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지만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도 다소 나아졌다.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8월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어려운 상태지만 전월에 비해 어려움이 다소 완화됐다.

전월에 비해 자금사정이 '매우 곤란' 또는 '곤란'이라고 밝힌 기업은 41.2%로 7월의 42.1%에 비해 0.9%포인트 줄었다. '매우 양호' 또는 '양호'라고 밝힌 기업은 7.3%로 전월 6.0%에 비해 1.3%포인트 늘었다.

중소제조업의 외부자금 조달사정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지만 전월에 비해 어려움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원활' 또는 '원활'이라고 밝힌 기업은 전월과 같은 6.0%인데 반해, '매우 곤란' 혹은 '곤란'이라고 밝힌 기업은 전월 33.2%에서 30.0%로 줄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비해 소기업과 영세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업종은 가죽·가방·신발(57.3%),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55.8%), 봉제의복·모피제품(55.4%), 섬유제품(50.0%) 등으로 나타났다.

## 수출중기, 환변동보험 적극지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실이 주최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전략' 간담회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 경제 거시지표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는 고용의 대응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은 현재 2만8천개 정도로, 작년에 비해 1700개가 줄었고 수출 채산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환율불안과 고유가 위험이 있는데다 고가제품은 일본과, 저가제품은 중국·인도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수출세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 15% 가량 투자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들은 투자가 줄고 있고 채산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지원과 관련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료를 깎아주고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무역협회가 보험료를 지원하며, 환위험관리 소프트웨어나 매뉴얼도 무상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계형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유예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과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가 유예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개월 이하의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 유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청장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에 언급,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자에 대해서는 조사이력 등을 국세통합관리시스템(TIS)으로 관리하고 조사지중 상습투기자에 대해서는 연2회씩 주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파악해 소득 탈루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는 약 2만6천건이었으나 올해는 2만3천건으로 줄일 예정이며 2007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더욱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전 청장은 "조세조약 남용,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적인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현지기업과의 부당거래 및 불법 외화유출에 대해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제재조치, 발급 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중기, 10곳 중 7곳 자금난

인천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회(지회장 이상태)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추석을 앞둔 자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와 '매우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무려 50%와 20%에 달해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활하다'는 4%에 그쳤고 '매우 원활하다'는 아예 응답자가 없으며 '보통이다'는 26%로 집계됐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에 대해 복수로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판매대금 회수 지연(80%), 매출감소(62.9%), 납품단가 인하(51.4%), 원자재난(28.6%), 금융권 대출곤란(20%), 환율(8.6%) 등이 차례로 꼽혔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해선 '보통이다'가 56%로 가장 많았지만 '곤란하다'(36%)가 '원활하다'(8%)에 비해 4배가 넘어 중소기업에게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경남지역 기업체 경영실적 저조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최근 경남지역 7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2005년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조업체 438곳의 부채비율이 평균 148.7%로 전년 대비 2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00.9%에 비해 50.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로, 지역 내 기업들이 다른 시·도의 기업보다 외부 자본을 많이 끌어다 쓴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은 40.2%로 전국 평균 49.8%보다 9.6%포인트 낮았으며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의 비율은 3.3%로 전국 평균보다 3.2%포인트 낮았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평균 3.2%로 전국의 6.1%보다 2.9%포인트 낮았으며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도 각각 전국평균 대비 0.9%포인트, 4.2%포인트 낮은 5.0%, 5.2%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인 제조업이 지난해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농·어업과 자영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분야는 전국 평균 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경남지역 306개 비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125.6%로 전국 평균보다 2.9%포인트 높았으며 차입금 의존도도 0.4%포인트 높은 25.9%를 기록했다.

## 경영애로 1위 '돈·인력'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등 지역 지식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인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가 최근 지역 지식서비스 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로 '자금·인력 부족'을, 18.2%는 '마케팅력'과 '판로확보 곤란'을 각각 꼽았다.

이에 따라 지역 지식서비스 업체들은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및 전문인력 지원(40.9%)' '전략적 서비스업 및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27.3%)' '자금·세제 지원확대(18.2%)' 등의 순으로 지원해주길 바랐다. 특히 업체들은 지식서비스산업이 '수출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63.6%)', '일자리 창출(22.7%)'을 통한 '실업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9.1%)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조업 등 타 부문에 비해 '정책자금과 세제지원(42.1%)', '연구개발 투자지원(36.8%)', '지원요건의 까다로움(15.8%)' 등 정책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조합참여 허용

단체수의계약을 대체해 내년 부터 실시예정인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도 입찰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과 공동상표 운영법인에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초안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들도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을 운영해온 조합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조합들의 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일부 정부부처와 업체들의 반발로 성사여부가 불투명 했었다.

## 내년도 중기 R&D예산 3600억원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규모(정부안)로 3600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은 당초 내년도 예산 목표로 5000억원 이상을 기대했으나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올해(2679억원)보다 1020억원 확대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며, 중기청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96억 → 199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531억 → 803억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62억 → 100억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160억 → 300억원)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240억 → 260억원) △이전기술개발사업(90억 → 92억원) 등도 소폭 늘었다. 이밖에 신규사업으로 연구장비이용클러스터 사업(50억원)이 추가됐다.

## 중소기업 금융전략 제공

HSBC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환율 전망과 경제동향, 중기 전용 금융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HSBC은행은 최근 매경인터넷과 업무 제휴를 맺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 관련 칼럼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밝혔다. 매일경제 인터넷 홈페이지(www.mk.co.kr) 오른쪽 아래 메뉴에서 '금융' 섹션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 공정위 “어음거래 폐지, 신중히 접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거래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어음이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어음 자체는 여전히 대금결제에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일거에 어음거래를 축소, 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거래 위축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어음제도가 폐지되면 은밀한 외상거래가 증가하고 추가적 금융비용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어음거래의 점진적 축소와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경제부 주관 개선방안에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법정부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용낮은 중기도 자금대출 쉬워져

산업은행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시중 은행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투기등급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은은 신용등급 BB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구조화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총 1000억원의 구조화금융펀드를 조성해 1차로 300억원을 산은자산운용을 통해 판매한다.

산은측은 1차 구조화금융상품 출시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자체신용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13개 BB급 이하 혁신형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지원액은 회사에 따라 최소 6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조화금융상품은 신용도가 다양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주식관련채권을 모아 유가증권신탁을 통해 1종 수익권과 2종 수익권으로 리스크를 분리한 후 동 수익권을 산은자산운용이 설정하는 특별자산펀드에 편입, 위험과 수익률에 따라 투자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3년 만에 최고

중소기업대출이 2003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www.bok.or.kr)이 발표한 <200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이 5.7조원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

출이 5.9조원 늘어 2003년 3월 6.1조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32.5조원 증가해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약 4배나 많았다. 이 같은 급증세는 추석 자금 수요,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0.2조원 감소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에도 불구하고 △8월 2.7조원에서 △9월 3.4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6조원 증가해 전월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가을 이사철의 도래와 주택거래세 인하 기대에 따른 8월 중 대출수요의 이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9월 중 은행 수신 증가폭은 정기예금의 호조 지속과 수시입출식예금의 급증세로 인해 4.3조원에서 13.6조원으로 확대돼 2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 업계 “지방중기청 지자체이관 곤란”

중소기업 업계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방중기청 지자체 이관 주장과 관련, 비생산적인 논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국 기초단체장이 제기한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 실행만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04년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을 다시금 꺼내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며 소모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창업후 3년간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창업 후 3년 동안 기업활동과 관련한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체에 설비투자비 중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도권 공장 증설의 선별적 허용이 검토되고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총량 규모도 크게 늘어나며 공장설립을 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면제 등의 특례가 주어지는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에 신설되는 등 공장입지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